

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새로운 사회 2013] (10)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 ①

2012.04.23 |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 edu@saesayon.org

목차

1. 왜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는가.
2. 구조개혁인가, 불법규제인가.
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
4.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목표

새사연은 2013년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에 필요한 진보대안정책을 담은 새 책을
2012년 5월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새 책의 일부분입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연재 순서>

1. 90년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였을까?
2. 민주정부 10년 동안 왜 경제 민주화를 못했나?
3. 승자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 '신뢰와 협동'의 가치로
4.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를 제안한다.
5. 시장경제,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경제
6.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라.
7.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8. 자본유출입 규제가 대세다.
9. 변동성을 유발하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
10. 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1. 왜 다시 재벌 개혁을 말하는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까지 문제 삼겠다고 나서면서 분노는 더 크게 번져갔다. 재벌가의 2~3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녔던,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에 꽤 많이들 손을 댔던 모양이다. 그런데 재벌가 자녀들은 하나의 트렌드 비슷하게 취미생활 삼아 빵집 사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인근의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동네 상인이 “대기업들은 목 좋은 곳에 점포를 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린 익

사 직전”이고 하소연 한 것이 공연한 업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실로 15년 만에 우리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15년 전 외환위기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 외국자금을 무리하게 끌어와 과잉 중복투자를 하는 바람에 환란을 맞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불러들인 장본인이 재벌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 그래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컸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배경으로 재벌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재벌개혁을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 올렸을까.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4년 동안 국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고 고용은 더 불안정해졌으며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런데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대기업을 살리면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던 ‘적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위기의 와중에서도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 집단들은 ‘나 홀로 성장’을 구가했다.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지자 친 기업 정부를 자임하던 이명박 정부 자신이 집권 후반기인 2009년 하반기부터 ‘공정사회’와 ‘동반 성장’을 말해야 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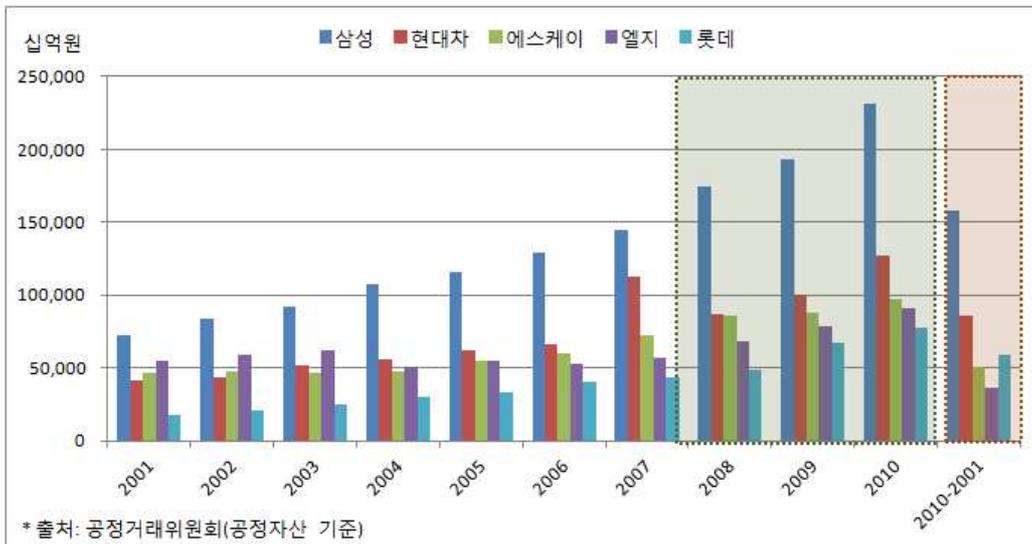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한국의 재벌기업집단들이 총수의 2세, 3세들을 동원하여 늘린 계열사들이 기껏 동네의 빵집, 자전거 가게, 라면, 순대 등 서민 업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면서, 규제를 풀어주었더니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서민이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동네골목으로 치고 들어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국민경제의 작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다시금 엄청나게 커졌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실로 오랜만에 경제력 집중 억제와 상징적 정책 수단이었던 ‘출자총액 제한 제도’ 부활 얘기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경제력 집중이란 크게 1)시장 집중, 2) 소유 집중, 3) 일반집중의 문제로 요약되는데 우리 재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집중’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다. 일반 집중이란 “산업이나 제조업 일반에서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와 같은 광범위한 경제영역에서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지난 10년 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화되었기에 뺑가게 까지 진출하게 되었을까? 우선 재벌의 일반 집중도를 ‘양적 규모’ 차원에서 자산, 매출, 순익, 계열사 수 같은 몇 가지 지표로 확인해 보자. 특히 55개 대기업 집단¹⁾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LG, 그리고 롯데 등 5대 재벌 집단이 매출의 절반, 순이익의 2/3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5대 재벌 집단을 기준으로 2000년대 10년 동안 자산, 매출, 순이익, 계열사 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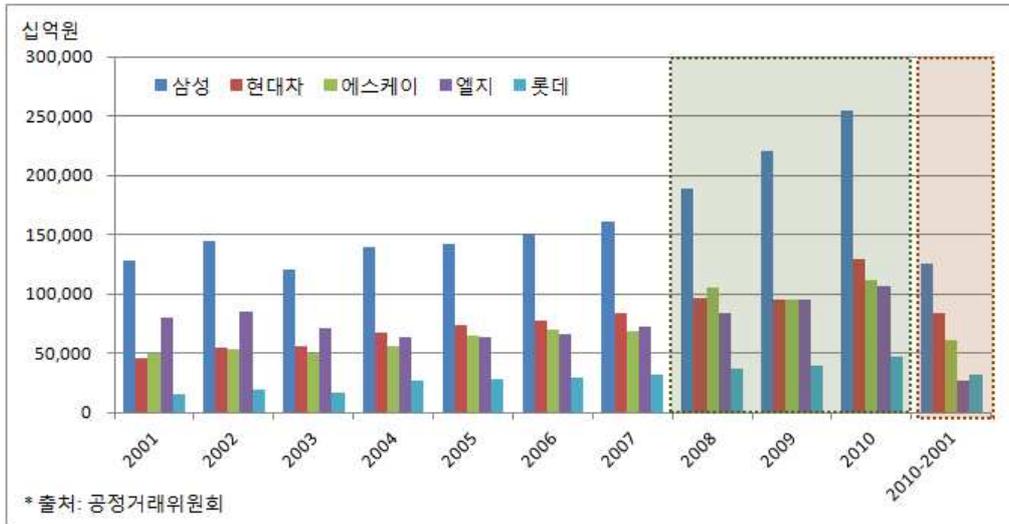
(1) 자산규모: 10년 동안 삼성과 현대차의 자산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3배 정도의 자산이 팽창했고 삼성은 70조원에서 230조원으로, 5대 재벌집단은 230조 원에서 620조 원 규모로 팽창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200조 원이 늘어나서 가장 속도가 빨랐다.

[그림1] 5대 재벌 집단 자산규모 변동 추이(2001-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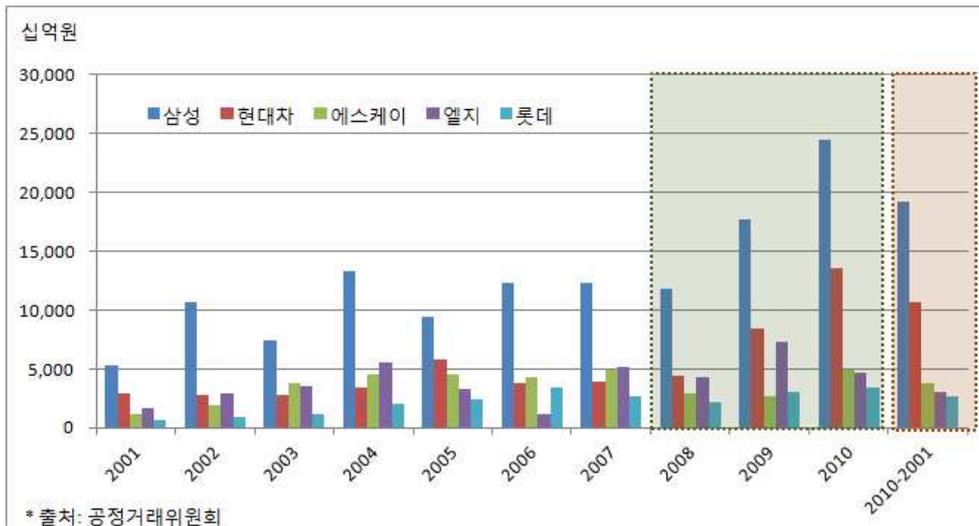
1) 2011년 4월 기준으로 공기업 포함 자산규모 5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55개 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재벌집단은 38개, 총수 없는 민간 기업집단은 9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이 8개이다. 단 이들 못지않은 자산과 수익규모를 자랑하는 금융지주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된다.

[그림 2] 5대 재벌집단 매출규모 변동 추이(2001-2010)



(2) 매출규모: 삼성그룹이 2010년 25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가 100조원을 넘어가는 등 10년 동안 5대 재벌그룹의 매출규모는 평균 2배 정도가 늘어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적 총 수요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가 230조 원이나 더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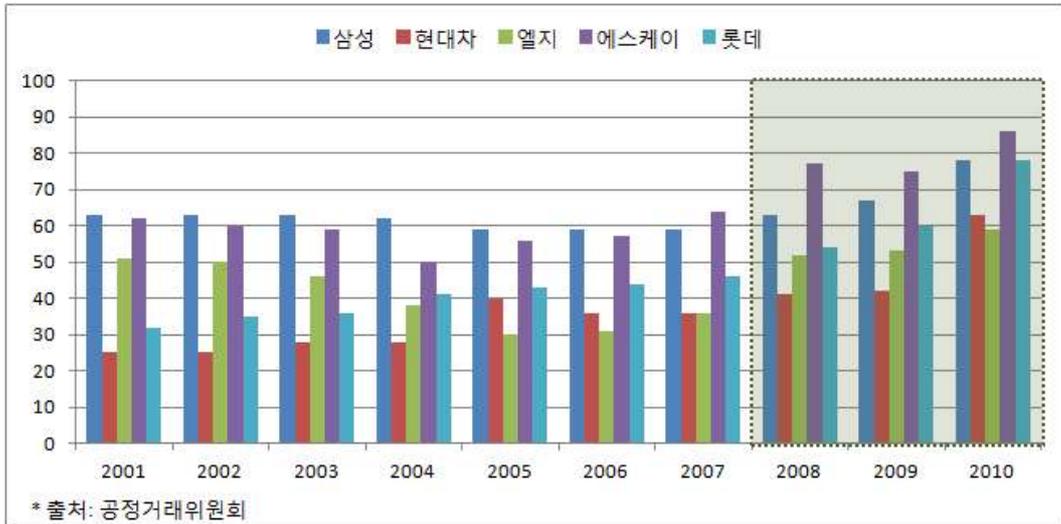
[그림 3] 5대 재벌집단 순이익 변동 추이(2001-2010)



(3) 순이익: 5대 재벌그룹의 순이익은 10년 동안 약 4배 정도 증가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삼성이 24조, 현대차가 1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두 재벌이 비약적인 성

장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삼성은 순이익이 2배 늘어났고, 현대차는 무려 4배가 늘어나면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한국의 연 평균 성장률이 3%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대 재벌 집단의 이익 신장률은 경이로울 정도이다. 나 홀로 성장이 빈 말이 아닌 것이다.

[그림 4] 5대 재벌집단 계열사 변동 추이(200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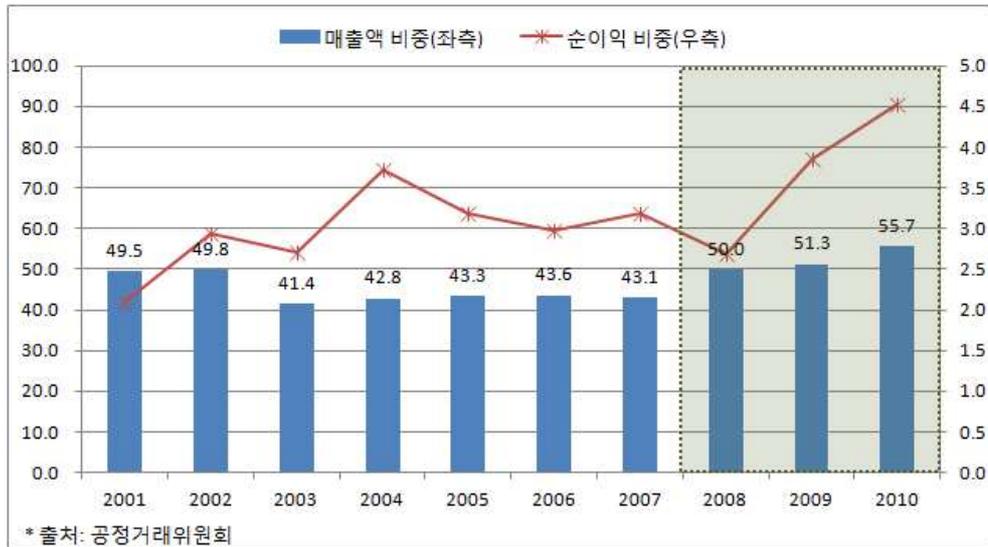


(4) 계열사: 참여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재벌의 계열사 늘리기는 거의 미미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5대 재벌집단의 계열사 수가 다시 급팽창하면서 이 기간 동안 추가로 늘어난 계열사만 123개에 이른다. 자산 총액 5조 이상 대기업 집단 전체를 보았을 때에도, 946개(2007) -> 1137개(2008) -> 1264개(2009) -> 1554개(2010) -> 1629개(2011)로 비약적으로 팽창해왔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대기업 집단 중심의 인수합병, 지분취득, 신규회사 설립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삼성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집권 이전에 59개 정도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후 4년 동안 계열사를 지속적으로 팽창시켜온 결과 2012년 1월 기준으로 79개 회사가 삼성그룹 밑에 있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시작되었을 2002년 당시에 계열사가 63개였던 삼성그룹은 참여정부 5년 동안 계열사가 4개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실로 다양한 업종 분야에서 다시 20개나 늘었던 것이다.

으니 다시 재벌개혁이 제기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림6] 5대 그룹사의 매출액 비중과 순이익 비중 변동 추이(GDP대비, 2001-2010)



자산, 매출액, 순이익, 계열사 모든 면에서 볼 때 특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재벌 집단의 팽창은 눈에 띄게 두드러졌고, 경제력 집중도 가속화되었다. 말로만 ‘친 재벌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친 재벌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재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확대되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배경이 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대목은 양적인 규모 면에서 일반집중도의 팽창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른바 ‘다각화’라고 부르는 업종 다양화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빵가게, 순대가게까지 잠식했다는 사회적 비난의 근거가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준다는 것이다. “20개 재벌 기업 집단의 평균 영위 업종 수가 200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하여 2001년 10.6개 업종에서 2011년 17.1개 업종으로 대폭 증가하여 영위 업종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 집단의 다각화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는 이를 보여준다.⁴⁾ 경제개혁 연구소에서도 “재벌 기업집단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진출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 진출

3) 하준(2011), “기업집단의 다각화 추이 및 결정요인”, 산업연구원

4) 산업연구원, “기업집단 다각화 추이 및 결정 요인”, 2011.12

비중은 증가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지적한 적이 있다.⁵⁾

<p>Tip) MB정부의 친 재벌 정책을 요약하면?</p> <p>-MB정부는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지지’라고 하는 3대 재벌친화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 중 규제 완화 분야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상호출자제한 기업 규모를 완화: 자산규모를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인 경우로 줄였다.(2008.4 공정거래법 개정)</p> <p>2)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한다.(2009.3 공정거래법 개정)</p> <p>3) 금산분리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을 기존 4%에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확대함(2009. 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p> <p>4)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산업자본과 비은행 금융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2009.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p>

2. 구조개혁인가, 불법 규제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외환위기 시점으로 되돌아온 재벌체제의 구조 자체를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들의 불법과 탈법을 엄격히 통제하고 법치주의를 세울 것인가. 또는 재벌 구조개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 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도덕적,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사후적 재분배’를 강제하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인가. 예를 들어 사후적 재분배 차원에서 대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제’ 방안이나, 아니면 법인세 증세를 통한 국민 경제적 차원의 재분배를 추진할 것인가.⁶⁾

5) 경제개혁연구소, “국내 재벌그룹 팽창에 관한 분석과 그 대응방안”, 2011.8

6)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011년 제기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호지부지 되다가, 2012년 2월 2일 13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협력이익 배분제’라는 이름으로 어렵게 합의되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고 대기업이 도입하면 동반성장 평가시 가점을 주는 정도다.

현재 단계에서 경제력이 집중된 대기업 집단이 자원 동원의 효율성 측면이나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지, 아니면 일정한 경제력 분산과 독립기업 체제, 또는 독립 기업들의 수평적 협력 체제가 지향할 바인지를 논쟁하이 것은 급한 일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원의 집중과 활용이라는 ‘추격모델’로서의 재벌체제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GDP기준 13~15위를 오가는 한국경제가 몇 위까지 가야 추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7)

우리는 재벌에 대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의 4가지 때문이다.

① 2008년 이후 우리나라 100대기업의 일반 집중도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갈 정도로8) 경제력 집중이 세계적으로 보아도 높은 수준인데, 더 문제는 이후에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나 장치가 현재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재벌체제에 대한 구조개혁 요구가 우선 여기서 발생한다.

향후 경제력 집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재벌 3세 승계와 맞물리면서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재벌을 추적해왔던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이미 2011년 3세 상속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등 재벌 3세 자녀들로의 분할 승계는 매우 가시적인 반경 안에 들어왔으며 차기 정권 안에 모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권은 현재의 재벌 총수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운 3세 재벌체제의 구조가 착근되려는 시점에서 재벌구조에 대한 규제의 틀과 질서를 국민경제 차원에서 세워두는 것은 향후 10년 이상의 재벌체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선거용 정치구호로 내용도 없이 함부로 재벌개혁을 고창하다가 선거 끝나면 폐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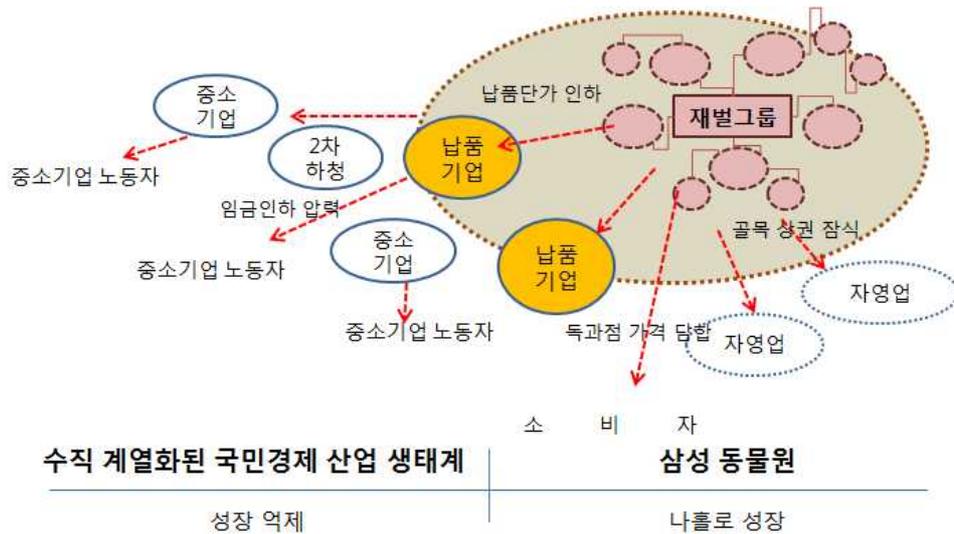
7)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그렇지만 의외로 진보개혁세력의 일반적 합의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기업 그룹의 크기와 계열사 숫자를 ‘공정성’과 ‘민주성’의 척도로 삼는 것이야 말로 자유주의 경제사상, 즉 신자유주의 사고”라면서, “삼성그룹 계열사가 100개에서 300개로 늘어나는 것을 용인하되, 단 그것이 종업원의 권익 신장과 하청 중소기업 등 관련회사의 상생으로 달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2007, 『복지국가 혁명』

8) 2002년 40%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100대 기업의 집중도는 2008년 역사상 처음으로 51.2%에 도달했고 이는 200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12월 시장구조조사 보도자료.

② 사실 북미나 유럽에도 한국의 재벌 수준으로 집중된 거대 독점기업과 기업 집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 나름대로 이를 견제하면서 역학적인 균형을 이루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업 집단의 덩치는 크지만 소유권을 확실하게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견제하거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정당이 존재하여 정치권에서 견제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회세력에 의한 견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 또는 금융자본이든 소수 주주든 나름대로의 자본시장을 통한 견제 장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벌에 대응할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이 권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③ 재벌이라는 압도적인 경제 주체와 여타의 경제 주체가 최소한의 ‘균형적인 거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하청 중소기업의 관계, 재벌과 지역상인, 자영업의 관계, 그리고 재벌과 소비자의 관계가 지극히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부의 평등한 재분배를 심각히 왜곡시킨다.

[그림15] 삼성 동물원과 산업 생태계 모형



이것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공존해야 할 ‘산업 생태계’에서 최고의 포식자인 재벌

이 일방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철수 원장의 삼성 동물원, 엘지 동물원 주장이나 한림대 이동걸 교수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30대 재벌체제를 깨고 300대 기업체제가 되어야 한다. 40대 재벌체제를 깨고 4000대 기업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재벌 대기업 집단 문제는 막강한 경제 권력으로 등장하여 이익을 독식하고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여타 경제주체들의 생존환경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④ 1990년대 한국경제와 비교해서 보아도, 그리고 국제적 비교를 해 보아도 현재 재벌 대기업의 고용기여도는 형편없이 적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재벌 체제의 효용성을 따지는 최종적인 기준은 결국 고용 기여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공기업을 포함하여 300인 이상 기업이 종사자 수가 전 산업기준 1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1993년에만 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22.6%였다.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 대기업과 비교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9년 현재 일본과 대만의 대기업 고용비중은 대략 22~24%여서 우리의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비중이 무려 50%를 넘는다.¹⁰⁾ 이 구조가 전적으로 재벌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고용 배제적인 대기업체제는 국민경제를 위해 반드시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 준다.

이상의 네 가지 문제들은 단지 재벌의 불법행위 엄단 수준을 넘어서 재벌체제의 ‘구조개혁’ 자체가 필요하며, 소유권 집중 완화를 포함하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근거가 된다.

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최고의 권력집단인 재벌을 상대로 정말 구조개혁을 해 낼 수 있을까? 진보운동이 습관처럼 재벌개혁, 재벌해체를 쉽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거대 독점기업 집단에 대한 개혁이나 해체는 ‘대공황’이나 ‘전쟁’의 상황 등에서나 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다. 정치권력 교

10) 중소기업중앙회, 2011, 『해외중소기업통계』

체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 법학자가 이미 10년 전에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이 실패할 것을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적이 있다.

“재벌 개혁은 평상시에 민주적인 정부가 통상적인 권력행사의 방법을 통해서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아마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역사상 재벌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과 독일 두 나라밖에 없는데, 이들도 따지고 보면 재벌개혁을 자력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후 점령당국의 힘에 의지해서 강압적으로 실현하였기 때문이다.”¹¹⁾

이처럼 재벌개혁이란 역사적으로 매우 엄중한 정도 상황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벌개혁 논쟁은 상당히 가볍고 책임성이 안 느껴진다.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막연히 정치권의 재벌개혁운동에 휩쓸려서 따라가지 말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재벌개혁 논쟁 즉, 한국의 독점기업집단의 개혁 전략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복지 담론의 경우는 북유럽 모델이라고 하는 상당히 전형적인 성공 모델을 기준삼아 진보운동이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세울 수 있었지만 대기업 집단의 개혁에는 그와 같은 자산이 없다. 또한 복지 담론에 저항하는 보수는 불특정 다수이지만, 재벌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아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권력이 아닌가?¹²⁾

그렇다면 우선 2012년 지금 시점이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재벌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주 객관적인 여건은 확보 되었는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분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헤어날 수 없는 장기 위기국면에 빠지고 월가 점령운동으로 상징되는 ‘불평등에 대한 저항운동이 세계화’되는 시대적 국면을 보건데, 또 한 번의 재벌개혁운동이 가능한 시점에 온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현재 상태대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통제 없이 3~4년 이상 계속 확대된다면,

11) 권오승, 2001,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재벌정책에 주는 의미”
12) 현재 이론적으로 재벌개혁의 목표 모델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은 향후 재벌개혁 논쟁에서 상당한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방식의 ‘경제 민주화 논리’를 상당히 보강하여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무 거시경제 안정화 모델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강도는 불가피하게 커져갈 수밖에 없고, 향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재벌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내외적인 최소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재벌개혁을 말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고, 어떤 강도이어야 하며,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치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의 국제적, 국내적 상황이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목표

외환위기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재벌은 부패와 부실, 불투명과 같은 매우 전근대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기업집단이었고, 각종 특혜로 성장했을 뿐 국제적인 경쟁력도 없이 몸만 큰 취약한 기업집단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해체하고 근대적인 기업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이 있었다. 실제 외환위기로 재벌들은 대거 부실에 빠졌고 30대 재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재벌이 해체되었다. 2위 재벌인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것까지 목격했던 우리 국민들은 재벌 해체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아니라는 경험까지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다르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재벌의 각종 편법과 비리가 지금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월가의 최첨단 금융회사들의 비리가 한수 위가 아닌가. 또한 지금의 삼성과 현대차가 아무런 국제 경쟁력도 없이 정부 특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의 기술과 실력이 떨어진다고 한들 그것은 애플이나 도요타 등 세계 1등 기업에 비해 아직 뒤진다는 것이지 이들이 후진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왜 개혁하거나 심지어 일부 계열사를 분리해야 하는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력 집중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가전이나 자동차, 석유, 통신 등 각종 품목 시장에서의 시장 집중도가 높아져 독과점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

라, 재벌 가족일가에게 소유와 지배의 집중도 역시 다시 높아졌다. 특히 우리 국민 경제 규모에 비교한 5대 재벌, 10대 재벌 그룹의 경제력 비중이 다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후과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하는 논리적 기초는 어디서 나오는가.

①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의 논리가 있다.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형성은 사실 보수 자유 시장 이론가들도 반대했다. 독점이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리는 “독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독점에 대한 규제는 효율성의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 경제학의 본산 시카고 학파들의 주장이기도 한데, 그들은 독점 금지법의 유일한 목표는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이며 이는 사회의 경제적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었을 때 달성되는데 독점이 이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2012년 초 한나라당 정책왜신분과 소속 권영진 의원은 재벌개혁 브리핑에서,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의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¹³⁾ 보수 세력이 재벌개혁 논리를 만들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데 바로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미리 재벌 개혁의 틀과 한계를 제한하고 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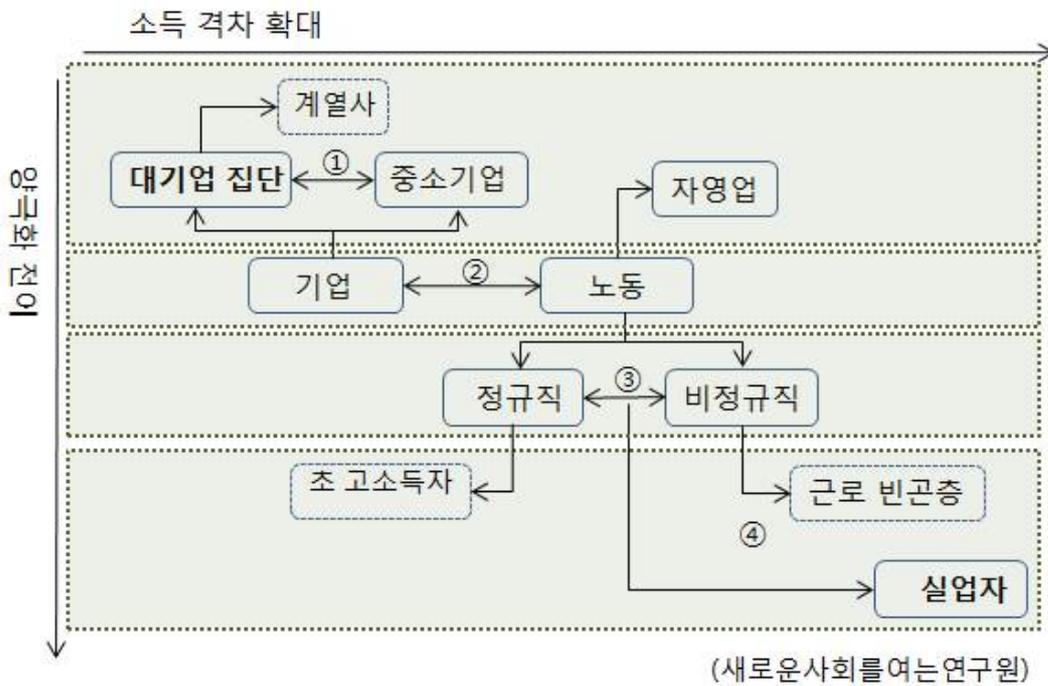
② 더 강력한 재벌개혁 논리는 현재의 양극화체제를 허물고 분배의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보다는 훨씬 전진적인 관점이 분배 왜곡의 시정과 정당한 분배달성이라는 차원의 접근이다. 즉, 독점의 폐해는 부가 소비자나 영세 사업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업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에 있으며, 독점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부의 편중을 억제하는 데에서 그 일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독점 금지정책의 정당한 목표로서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으로써 민주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상당부분 중산층이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근거다.

유사한 논리로 세계 최초의 반독점 법인 1890년 미국 셔먼법(Sherman)을 제안한

13) 연합뉴스, 2012.1.27일자

셔먼 의원 자신은 입법 제안 이유에 대해서, "기업 간 결합은 경쟁의 제한을 통하여 몇몇 개인 때로는 단 한 사람에게 의하여 지배되는 거대기업에게 소비자로부터의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규제하는 것이 동 법의 목적"임을 전제했다.¹⁴⁾ 당시 미국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의 집중 문제가 중소 사업자나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되고, 이런 주장이 의회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셔먼법이 제안된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은 미국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재산관계, 부와 소득의 분배의 정의 등을 요구하는 급진적인 사조가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의 시대였다는 말이다.

[그림9] 한국경제 양극화의 적하효과 구조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전근대적인 낡은 경제 유산'을 청산한다는 식으로 재벌개혁이 제안되어서는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민들과 공감할 수도 없다. 현대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재벌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독과점이 부의 분배와 재분배를 극히 왜곡시키고 결국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가속화시켜왔다는 점을 주

14) 홍명수, 2006,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경인문화사

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강화가 경제 권력의 수준으로까지 심화되었고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되듯이 경제 권력이 집중되면 그 이상의 후과가 오는 것이다. 지금의 재벌개혁의 당위성은 여기까지 왔다. 때문에 재벌 해체라는 말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다. ✎